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3월 3일 김인숙, 김은화, 강동구 의원 등 7인

나. 회부일자 : 2011년 3월 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6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11. 3. 10) 상정
- 제16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11. 3. 10) 수정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 인 숙 의원)

□ 제안이유

-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그 중 200만이 넘는 노동자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 전국 각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과 고용보장,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파업과 농성을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 이와 관련, 우리시 지역의 노동, 사회단체에서도 비정규직의 권리보장을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으므로,

- 우리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고용불안 해소, 불합리한 차별 등의 시정과 근로조건향상, 여성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부천시 비정규노동정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 다. 부천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라. 노동자의 기본권보장,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부터 제15조까지).

3. 질의 및 답변요지 : 속기록 참고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조례안 전체 조문에서 노동자라는 용어를 근로자로 수정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현재 노동계에서는 근로자보다 노동자 호칭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추세로서, 상위법 개정이 된 후에 신속히 개정함이 타당함.
○ 조례안의 내용들이 현 노사민정협의회 기능과 중복으로 사료되어 노사민정협	○ 조례안과 노사민정협의회 기능이 상이하며, 노사민정협의회에 민주노총은 참

<p>의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p> <p>○ 조례안 제9조 소위원회 관련 소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싶어 심의를 협의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p> <p>○ 조례안 제12조(사업) 제5호 여성노동상담 관련 제1조(목적)에 여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조문을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p> <p>○ 비정규직 권리보장과 지원센터 지원을 하는 자치단체가 있는지?</p> <p>○ 조례안 제4조 협의회 구성관련 사용자가 제외되어 있는데 의견 수렴을 위하여 포함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p>	<p>여하지 않고 있음.</p> <p>○ 심의를 협의로 수정함에 동의함.</p> <p>○ 당초에는 여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으나 조례안을 압축하는 최종 과정에서 생략되었으며, 조문 수정에 동의함.</p> <p>○ 전주시와 울산 북구가 있음.</p> <p>○ 본 조례안이 공공부문에 해당되므로,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며, 협의회 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음.</p>
---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

○ 없음

7. 기타 사항(관련 시민 의견 청취)

○ 민주노총(경기·김포·시흥) 김 찬 조직국장

①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동 발의를 해 주신 세분의 의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②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이 비정규직인 현실에 오늘 본 조례안이 기획 재정위원회에서 원안 의결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이 발의되기 까지 공청회를 거치고 노동계의 다양한 의견을 집약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시급한 실정으로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122
의결 연월일	2011. 3. 10

제안년월일 : 2011년 3월 10일

제안자 : 기획재정위원장

1. 수정이유

- 비정규직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및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며, 소위원회 역할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차별 등의 시정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를 “불합리한 차별 등의 시정과 “여성비정규직노동자의 모성권 보장 및 일가족 양립지원, 경력단절 예방 및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로 하고,(안 제1조).
- “위원회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의 적합성 여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

다”를 “위원회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로 하며,(안 제9조 제1항).

- “시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모성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노동관계법령 준수여부를 지휘, 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모성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하며 매년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안 제14조 제1항).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불합리한 차별 등의 시정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를 “불합리한 차별 등의 시정과 여성비정규직노동자의 모성권 보장 및 일가족 양립지원, 경력단절 예방 및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로 한다.

안 제9조제1항 “위원회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의 적합성 여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위원회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의 적합성 여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4조제1항 “시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모성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노동관계법령 준수여부를 지휘, 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모성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하며, 매년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제정안과 같음.』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내에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 보장과 고용불안 해소, 저임금, 불합리한 차별 등의 시정과 <u>〈삽입〉 근로조건</u>의 (생략).</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내에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 보장과 고용불안 해소, 저임금, 불합리한 차별 등의 시정과 <u>여성 비정규직노동자의 모성권 보장 및 일가족 양립지원, 경력단절 예방</u> 및 <u>근로조건</u>의 (제정안과 같음).</p>
<p>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부천시 사무의민간위탁의 적합성 여부와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을 <u>심의</u>하기 위하여 (생략).</p> <p>② 생략</p> <p>③ 생략</p>	<p>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부천시 사무의민간위탁의 적합성 여부와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을 <u>협의</u>하기 위하여 (제정안과 같음).</p> <p>② 제정안과 같음</p> <p>③ 제정안과 같음</p>
<p>제14조(노동인권과 기본권 보장) ① 시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모성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노동관계 법령 준수여부를 지휘, 감독하고 그 <u>결과를 공개</u>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제14조(노동인권과 기본권 보장) ① 시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모성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하며, 매년 노동관계법령 <u>위반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확인</u>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제정안과 같음</p> <p>③ 제정안과 같음</p>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내에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 보장과 고용불안 해소, 저임금, 불합리한 차별 등의 시정과 여성 비정규직노동자의 모성권 보장 및 일가족 양립지원, 경력단절 예방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정책협의를 위한 비정규직 노동정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 “비정규직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 노동자”라 함은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통하여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는 정규직노동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노동자 등을 모두 말한다.

2. “공공부문”이라 함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시의 산하기관(출연 및 투자기관 포함), 시의 민간위탁 사업체 등을 말한다.

제2장 비정규노동정책협의회

제3조(비정규직노동정책협의회) ① 부천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제반 노동인권 보호와 정책협의를 위하여 비정규직노동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부위원장 중 1명 여성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시의 업무담당국장
2. 부천시의회이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3. 노동단체의 대표,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장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8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협의회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2.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위원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의 적합성 여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는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제11조(설치) ① 시장은 부천시 관내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 “비정규직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시장은 비정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 ① 비정규직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3. 노동관계법교육, 성평등교육,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청소년노동인권 교육 등 비정규직 교육사업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소 등 고용촉진사업
5. 여성노동상담, 여성비정규직연구조사사업, 모성보호, 일·가정양립에 대한 교육 등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사업

- 6. 본 조례의 목적취지에 동의하는 노동, 시민사회단체의 비정규직 활동의 연대사업
 - 7. 부천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참여 등 부천시 공공부문 업체의 노동관계 법령 준수 관리 및 조사사업
 - 8. 기타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둔다.

제13조(운영) ① 시장은 필요시 비정규직센터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고 그 운영절차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위탁기간 및 그 운영, 해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 제14조(노동인권과 기본권 보장)** ① 시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모성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하며, 매년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휴게공간과 샤워장, 세탁시설, 체육시설, 수유실, 성별 탈의실을 제공하고 탁아방, 어린이집 이용권리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부천시가 민간 위탁하는 수탁업체의 변경 시 기존 고용 및 근로조건을 승계토록 하여야 하며 수탁업체와의 계약 해지 시에는 전환배치 등

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5조(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교육 등) ① 시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법 및 노동기본권의 숙지, 보장과 직장내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비정규직센터, 노동조합의 연합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